

KMI 동향분석

VOL.91
2018 JULY

발간년월 2018년 7월(통권 제9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남정호 해양연구본부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jhnam@kmi.re.kr/051-797-4712)

최근 노동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우선 순위는 경제개발에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협력이 진전될 경우 철도, 도로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육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해양부문에서도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반영된 수산분야나 항만현대화 등을 위한 교류협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자원 및 공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등을 포괄하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및 기존의 10.4 선언이나 북한의 대외발표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직접교류협력의 모멘텀은 당장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2017년 북한의 해양발전잠재력은 현재 전 세계 221개 평가대상 해역 중 207위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는 장래 북한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해양교류협력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해양분야에서 남북한 직접 교류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협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해양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우회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강화에 대응하여 2002년 이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와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의 정식회원국으로 활동 중이고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에 대해서도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한 국제 민간기구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바닷새 조사를 위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한스 자이텔 재단, Birds Korea 3개 기관이 2018년 5월에 북한의 문덕기구를 방문하였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남북한 협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해양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양협력은 해양공간관리,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과학기술협력, 해양 에너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다. 각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남한-북한 삼각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

■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

-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선언한 판문점 선언¹⁾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것임을 함축함
-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은 북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특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야기할 동인으로 기능할 것임
-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남북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임을 암시함
- 먼저 북한은 핵무장을 완료한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경(先經)노선²⁾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어, 남북관계 및 북한의 국제관계에서 경제성장이 중심의제가 될 것임³⁾
- 이에 따라 북한은 북미회담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동시적, 단계적 해결’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역학구도를 악화시키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국내 정치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지렛대로 북미관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북미관계의 악화는 백악관의 정치공간을 위축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회복불능상태의 북미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남북정상선언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남북회담은 순항 중

-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겠다는 합의사항이 후속회담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
- 6월 22일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음
-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도로(6월 26일), 철도(6월 28일), 산림(7월 4일) 분야 협력을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함의함

1) 정식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3개 조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18년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의 채택은 핵무력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정책의 변화를 의미함. 이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의정보고를 통해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라는 결언을 통해 선경노선으로 전환을 명확히 했음

3) 뉴시스 1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 금강산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외국인의 토지사용 및 세금 등에 대해 특혜를 약속하고 있다고 함(뉴시스 1 2018.06.25.일자)

■ ‘서해북방한계선’의 명기는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

-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정상회담, 총리회담 및 장관급 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 충돌방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음
- 남북한 해상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서해에서 무력충돌 방지가 각종 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으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음
- 이는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는 여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남북한 해상 경계를 둘러싼 민감한 사항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회피하였음
- 그러나 판문점 선언 제2조 제2항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명기함으로써,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실체를 인정함
- 이는 남북한 군사적 대립과 충돌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고, 향후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해양협력 모멘텀은 부재

■ 북한의 선경노선은 향후 남북협력이 육상 및 경제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

- 북한의 선경노선으로 전환과 더불어 36년 만에 개최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북한은 중요한 정치행사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 채택하였으나, 금번 5개년 전략이 선경노선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일 시대에도 열리지 않았던 당대회를 통해 채택되었다는 점임
- 핵무력의 완성과 남북관계의 개선,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진행이라는 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경제분야 교류협력이 중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철도, 도로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남북한 협력에서 우선 의제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간석지 개발에 관심이 높아 향후 개발중심의 해양전략 추진 전망

- 조선중앙TV의 2015년 6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심이 많아 서해에 해양기술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서 ‘석탄·금속·철도, 기계·화학·건설, 농업·수산업·경공업, 국토관리, 대외경제’로 구성된 부문계획에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략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북한은 1981년 노동당 제6기 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4대 자연재조사업」⁴⁾ 중 간석지 개간 사업은 2000년대 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주춤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재개하여 3개 간석지 개간을 추진함
- 대계도 간석지(평안북도 염주군, 87여 km² 개간목표, 2010년 준공), 홍건도 간석지(평안북도 서천군~동림군, 45여 km² 개간목표, 2016년 10월 1단계 준공완료), 룡매도 간석지(황해남도, 212여 km² 개간 목표, 2015년 6공구 15km² 완공) 등이 최근 준공된 개간지역임⁵⁾

■ 해양발전의 종합적인 잠재력을 의미하는 북한의 해양건강성 지수는 207위

-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는 매년 전 세계 연안국가의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북한은 평가대상 221개 해역 중 207위를 차지함⁶⁾
- 식량공급(food provision), 장소성(sense of place), 해양수질(clean waters) 등이 각각 39, 30, 55를 기록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과 수질이 현안이 되고 있음
- 낮은 수준의 해양발전잠재력은 미래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향후 5년 기간의 전지구 해양발전잠재력은 현재보다 6%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북한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한 해양분야 직접 교류협력의 우선순위는 낮을 것으로 전망

- 남북한 경제분야 협력, 인도주의적 교류,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회담은 성과의 창출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반영된 수산분야의 협력이나, 원산 갈마지구 종합개발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항만현대화 등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해양자원 및 공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포괄하는 해양분야 협력은 남북한 정상선언이나 북한의 대외발표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직접 교류협력의 모멘텀은 당장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4) 간석지 개간, 새땅찾기, 남포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5) 최성원, 북한 간석지 개간사업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2017

6) www.oceanhealthindex.org 2018년 5월 기준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에 높은 관심 보여

■ 북한은 대외경제 협력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우선

-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은 무역성이 총괄하고 있는데 2002년에 대외경제협력 창구를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CEECC)에서 국제협력총국(General Bureau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BCIO)으로 변경함
-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등 국제사회 압력 강화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성과가 미흡한 여건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보다 국제기구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임
- 금년 3월 랍사르 총회에서 북한의 랍사르 협약 가입이 승인된 이후 5월부터 정식회원국이 되었고, 서해 문덕지구와 동해 나선지구를 랍사르 습지로 등재를 추진 중임

■ 동아시아 지역 해양관련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은 북한의 참여에 적극적

-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관련 국제기구 및 사업은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PEMSEA),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OAP),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북아 사무소의 동북아시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사업(North-East Asian Marine Protected Areas Network, NEAMPAN),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등이 있음
- PEMSEA는 북한이 정식회원국으로 활동 중인데, 남포는 PEMSEA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김일성종합대학은 PEMSEA의 국가연안통합관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북한은 과거 YSLME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옅저버 국가로 관련 회의에 참여했으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정식회원국으로 전환되지 않았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PEMSEA는 기존 북한과 협의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고,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국제기구 및 프로그램도 향후 북한의 참여와 남북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판문점 선언의 ‘서해평화수역 조성’은 전지구 대상 국제기구의 관심을 촉발

-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UNESCO-IOC),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구역위원회(IUCN's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IUCN WCPA),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de Fund, WWF) 등 국제기구는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함

- 이는 평화수역이 접경해역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라는 주제가 국제기구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다 북한의 참여와 대외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의제를 지렛대로 적극 활용 필요

■ 직접 교류협력을 위한 창구가 없는 현실에서 국제기구는 가교역할 수행 가능

- 판문점 선언에서 10.4 남북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10.4선언에서도 해양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동어로,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으로 제한적인 실정임⁷⁾
- 북한의 해양공간 관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해안관리,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협력에 관한 사항은 합의된 바가 없어 당장 직접적인 교류협력의 의제로 될 가능성은 낮음
- 반면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국제기구와 프로그램 중 남북한 해양협력에 관심이 많은 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한 우회적 접근(detour approach)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국제사회 의제를 매개로 협력 추진

- 북한이 회원국인 유엔에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북한의 경제발전, 환경보호, 사회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유효한 매개체임
- 해양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외에도 연안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응, 재해저감, 빈곤퇴치 및 소득 증대 등은 북한의 선경노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체계를 혁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국제기구를 활용한 남북한 해양협력은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기능과 특성을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해양과학기술협력은 UNESCO-IOC,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전은 UNESCO-MAB, IUCN, NOWPAP, WWF, EAAFP, 랍사르협약 사무국, 해양오염관리는 UNEP, NOWPAP, YSLME, 연안관리 및 해양공간관리는 PEMSEA, EU, UNESCO-IOC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7) 판문점 선언 제1조 제6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URL: <https://www.kmi.re.kr/>